

민주, 방통위원장 줄줄이 탄핵 예고

尹 '방송4법' 거부권 유력에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 할 것"... 방송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진숙 후보자 비롯 이후 임명될 인사에 "모두 탄핵 방침... 타협할 수 있는 지점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다 (탄핵)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종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 직후 방송4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이후 전략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윤석열 정부

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이후 임명될 차기 인사에 대해서도 모두 탄핵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4법이 최종 폐기될 경우엔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변인은 "논의된 바는 없지만 그렇게(재발의) 되지 않겠다"라며 "야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 2인체제는 불법성이 있기에 즉각 (위원장)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4법에 이어 내달 1일에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나 실제 본회의의 개의 여부는 이날까지 불투명

한 상황이다.

윤 대변인은 "8월 1일 본회의를 확실하게 열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의총에서 "당 지도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의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부의장은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반대로 지난 4박 5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사회를 보이콧했다. 윤 대변인은 "주 부의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지역업체 활용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김관영 도지사,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시·군 방문 건의사항 신속 처리 등도 지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간부회의에서 "2025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각 실국에서는 기재부 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미반영 사업 중 반영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3차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역 제기업 및 정점사업 증액 검토를 위해 실국장 중심으로 기재부 예산실 과장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7월 18일 개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예타, 국가계획 반영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후속조치 이행에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은 대통령이 현장에서 지시하고 약속한 만큼, 전주~무주 구간은 반드시 국가예산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무주~성주 구간은 조속한 사전 타당성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진행된 14개 시·군 방문과 관련해, 김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다. 도민과의 대화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민과 시·군에게 결과를 빠르게 피드백해 주고, 신속하게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최근 출범한 여러 얼라이언스에 대해 "각 얼라이언스가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실국장이 책임지고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14개 시군 방문이 완료되었다"면서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게 아쉽지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윤·오프라인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30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제7회 '백년포럼'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김태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 국방전략산업 중소·벤처기업 발굴 필요"

전북자치도 제7회 백년포럼... 김태곤 단장 "기술력 있는 기업 집중 육성해야" 강조

전북은 국방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30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제7회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연구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인 김태곤 단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 단장은 방위사업청의 소개와 함께 국방 R&D 정책환경 및 국방과학기

술혁신 기본계획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 정책의 방향과 동향 및 미래 전망을 심도 있게 다뤘다.

김 단장은 국방 R&D사업의 유형과 획득 절차와 혁신 기술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방위산업의 생태계 조성의 측면에서 지역 거점을 활용한 전략사업과의 연계의 중요성과 밀착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은 국방 첨단 전략산업의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

였다.

이남호 원장은 "방위산업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진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통해 전북이 방위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권요안 도의원, 전북형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감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완주군 고산면 완주미더어센터에서 '전북형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북특별자치교육청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완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초등학교 417개 중 학생 수 60명 미만인 작은 학교가 210개(50.4%)에 이르며,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도, 교육청, 시·군, 대학이 협력해 다양한 농촌유학 프로그램,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를 통해 주 소이전 없이 작은학교로 전·입학 기회를 부여해 작은학교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권 의원은 "경상남도의 경우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이주를 통한 소멸위기 마을과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LH와 경남도·교육청·학교가 협업해 임대주택 건립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에서도 경남과 같은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현규 국장은 "경남과 같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원부담, 입주희망 수요파악, 기관별 추진의지, 협력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검토를 실시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익산 집중호우 피해주민 심리안정 집중

전북특별자치도가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를 겪어 불안해하는 마을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10일 집중호우 당시 익산시 옹포면 인근에 28ha 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12명의 주민이 마을경로당으로 대피했다.

이에 지난 26일부터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재난심리복지지원센터 전문심리활동가 3명을 익산시 옹포면 구룡곡 마을회관으로 파견하고

12건의 상담활동을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재난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욱 도민안전실장은 "심리적 불편함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있다면 요청 즉시 연계 상담을 지원하겠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